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AI 데이터센터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 ESG 주요 현안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3대 ESG 리스크
AI 전력 리스크의 파급 경로와 시장 전망
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로드맵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 활용 가이드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AI 데이터센터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김지환

경향신문 논설위원

AI 시대의 새로운 갈등,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

“

데이터센터 개발이 공공요금을 끌어올리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며 뉴욕주 주민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고 앞장서는 것은 주지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는 7월14일(현지시간) 대형 데이터센터 환경 인허가를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으로 불리는 이 유예 조치를 주 단위에서 도입한 건 뉴욕주가 처음이었다.

주 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선 비슷한 선례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파크 시, 워싱턴주 시애틀시 등 이미 300곳이 넘는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데이터센터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대운동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미국 내에서 최소 75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약 1300억달러 규모)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미국에서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은 데이터센터를 지어봐야 고용 효과는 미미한데 전기요금 급등, 수자원 고갈, 소음 등 부작용은 뚜렷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갤럽이 지난 5월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53%)보다도 높은 수치다.

세계는 ‘사업자 책임 강화’로 방향 전환,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자 AI 데이터센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빅테크들로부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자급자족’한다는 서약을 받은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오픈AI는 7월22일 미 조지아주에 3.2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카멜리아’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 사용량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8000만달러를 지역사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빅테크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해온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말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의 80% 이상을 신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자체 발전·저장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호주도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과 지역사회 영향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호주 AI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정부는 SK·GS·네이버 등이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 확보,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해외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다.

AI 데이터센터의 미래는 '지속가능성'에 달려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 구상대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사업자가 전력 효율을 높이고 물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전력망과 생태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면 서 해외처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3대 ESG 리스크

정부는 SK·GS·네이버 등이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부지·전력·인허가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연간 최대전력수요(100GW 내외)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해외는 뉴욕주 모라토리엄, 아일랜드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사업 기회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1. 왜 지금 '데이터센터 ESG'인가

AI 데이터센터는 그동안 성장 산업의 상징으로 다뤄졌으나, 2026년을 기점으로 ESG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전환의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규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기존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랙당 5~10kW 수준이었던 데 비해 AI 학습용 랙은 수십~100kW급으로 설계된다. 동일 면적에서 전력·냉각 부하가 한 자릿수 배 증가하며, 이는 국지적 계통과 용수 공급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사회적 수용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갤럽이 2026년 5월 공개한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53%)를 상회하는 수치로, 데이터센터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첨단시설'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 비용의 귀착 주체가 쟁점화됐다.

전력 인프라 보강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지, 일반 소비자 요금에 전가할지가 각국 정책의 핵심 논점이 되었다. 2026년 1분기에만 미국에서 최소 75개 프로젝트(약 1,300억 달러 규모)가 지연·중단됐다.

2. 3대 핵심 리스크

구분	리스크 내용	기업 노출 지점
전력(E)	계통 접속 대기 장기화, 수도권 수요·비수도권 공급 불일치, 전력배출계수 상승 시 Scope 2 급증	인허가 일정 지연, 전력조달 단가, 탄소비용
용수(E)	증발식 냉각 시 대량 취수, PUE 개선이 WUE 악화로 이어지는 상충 관계	취수 허가, 지역 물 스트레스, 갈수기 운영 제약
수용성(S)	고용 창출 효과 미미 대비 소음·경관·요금 부담 체감, 주민 반발 및 조례 제한	부지 확보 실패, 준공 지연, 평판 리스크

여기에 거버넌스(G) 측면에서 짧은 하드웨어 교체 주기(3~5년)에 따른 GPU·서버 내재 탄소가 Scope 3로 누적되는 구조가 더해진다. 전력(Scope 2)만 관리하는 접근은 향후 공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3대 ESG 리스크

3. 국내외 규제 동향 비교

구분	조치	규제 방식	시점
미국(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환경 인허가 1년 유예('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	인허가 정지	2026.07
미국(지방)	300곳 이상 지자체가 신규 데이터센터 금지·제한	조례 규제	진행 중
미국(연방)	빅테크로부터 데이터센터 전력 '자급자족' 서약 확보	자율협약	2026.03
아일랜드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의 80% 이상 신규 재생 에너지 조달 + 자체 발전·저장설비 의무화	법적 의무	2025년 말
호주	전력·물 사용 및 지역사회 영향 기준을 담은 '호주 AI 표준' 마련 발표	표준 제정	2026년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용수 사용 정보 보고 의무	공시 의무	시행 중
한국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부지·전력·인허가 전폭 지원	진흥·지원	2026년

핵심 시사점 : 해외는 비용 내부화(사업자 부담)로, 국내는 비용 외부화(정부·계통 지원)로 방향이 갈렸다. 이 격차는 지속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반발이 축적되면 사업자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은 **현행 제도가 완화된 시기에 자발적 기준을 선제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국내 제도 환경 점검

제도	내용	기업 확인 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시설의 계통 영향 사전 평가	부지 계약 이전 협의 착수 여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 직접거래 특례	특화지역 입지 검토 및 특례 적용 요건
K-ETS 제4차 계획기간	발전부문 유상할당 2026년 15% → 2030년 50%, 전력배출계수 매년 자동 반영	전기요금 및 Scope 2 배출계수 상승분 반영한 5년 원가 시뮬레이션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SSB 기반 국내 기준 확정('26.07), 자산 10조원 이상 2028년 우선 적용	데이터센터 전력·용수·Scope 3 지표 산정 체계

※ 제도별 세부 요건 및 일정은 소관 부처 고시·공고 기준으로 확인 필요

AI 전력 리스크의 파급 경로와 시장 전망

1. 이해관계자별 파급 경로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력계통과 요금 체계를 매개로 산업 전반에 확산된다.

기업 유형	파급 경로	핵심 대응 과제
데이터센터 사업자 (통신·클라우드·건설)	인허가 지연, 계통 접속비 부담, 주민 반대	입지 선정 시 계통·용수·수용성 3중 심사, 지역 상생 패키지 사전 설계
AI 수요기업 (플랫폼·제조·금융)	클라우드·코로케이션 비용 상승, 위탁 배출량이 Scope 3로 귀속	공급업체 전력 구성 데이터 확보, AI 사용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전력다소비 제조업 (반도체·철강·석유화학)	계통 혼잡 및 요금 인상분 공동 부담,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 심화	장기 PPA 조기 확보, K-ETS 유상 할당 확대와 연계한 원가 관리
금융·투자	대규모 데이터센터 PF의 좌초자 산화 리스크	인허가·수용성 리스크를 실사 항목에 반영, K-Taxonomy 적합성 검토

주목할 지점 : 2026년 7월 공시 모니터링에서 카카오·네이버·엔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AI 전력 폭증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전력 리스크가 개별 사업 이슈에서 **공시 항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2. K-ETS 제4차 계획기간과의 연동 구조

7월호 현안이 6월호 K-ETS 특집과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다.

- ◆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2026년 15% → 2030년 50%)로 발전 원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 ◆ 상승분은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며, **전력배출계수 매년 자동 반영** 방식 전환으로 기업의 Scope 2 배출량 계산 기준도 매년 변동한다.
- ◆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계통 보강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면, 이 비용의 귀착 주체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다.

즉 **AI 전력 수요 → 계통 투자 → 전기요금 → 탄소비용**의 연쇄가 형성된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업도 전력을 통해 이 리스크에 노출된다

3. 리스크 전망 및 대응 포인트

리스크 확대 요인	리스크 완화 요인	기업 대응 포인트
2035년 18.4GW 구축 계획 추진	액체냉각 등 냉각 효율 기술 상용화	신규 입지 계통·용수 여건 사전 심사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계통 혼잡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활용	비수도권 분산 입지 우선 검토
지역사회 반발 및 조례 규제 확산	지역 상생·이익공유 모델 정착	주민 소통 및 지역 편익 패키지 조기 설계
발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요금 상승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장기 PPA·녹색프리미엄 포트폴리오 구성
KSSB·EU 공시상 전력·용수 지표 요구	공시 기준의 국제 정합성 확보	PUE·WUE·Scope 3 측정 체계 우선 구축

전망 요약 : 향후 2~3년 내 국내에서도 ▲전력 인프라 비용 부담 원칙 정립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용수 효율 기준 도입 ▲지역 상생 요건 인허가 반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호주 사례가 참조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로드맵

AI 데이터센터 관련 ESG 리스크 대응은 '기반 구축(2026)', '전환 실행(2027~2028)', '경쟁력 확보(2029~2030)'의 3단계로 설계하는 것이 유효하다. 6월호 K-ETS 로드맵과 동일한 시간축을 적용해 두 과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단계 1: 기반 구축 — 2026년 필수 과제

1. 리스크 거버넌스 정립

- ◆ AI·디지털 투자 의사결정에 **전력·용수·수용성 심사 항목 신설**: CFO·CTO 공동 검토 체계
- ◆ 이사회 ESG위원회 보고 항목에 데이터센터 전력·탄소 KPI 편입
- ◆ 신규·증설 계획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요건 및 지자체 조례 사전 진단

2. 측정 체계 구축

- ◆ PUE(전력효율), WUE(용수효율), CUE(탄소효율), ERF(폐열재활용률) 시설별·월별 측정 착수
- ◆ Scope 2를 시장기준·지역기준 이중 산정으로 전환, 위탁 클라우드 사용분 Scope 3 귀속 여부 확인
- ◆ GPU·서버 등 IT 자산의 내재탄소(Scope 3 Cat.1) 1차 데이터 공급사 요청

3. 지역사회 관계 설계

- ◆ 입지 후보지 주민 인식 사전 조사 및 우려 사항 목록화
- ◆ 지역 편익 패키지(고용·세수·폐열 공급·기금) 초안 마련 —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 착수
- ◆ 소음·경관·용수 관련 정량 데이터 공개 방침 수립

단계 2: 전환 실행 — 2027~2028년

1. 시설 효율화 투자

- ◆ 고밀도 랙에 **직접액체냉각(D2C)** 적용, 공급수 온도 상향 운전으로 프리쿨링 시간 확대
- ◆ 인접 지역난방·산업시설 **폐열 공급 연계** 검토 (입지 선정 단계 반영이 관건)
- ◆ 비긴급 AI 학습 워크로드의 시간·지역 이전(carbon-aware scheduling) 도입

2. 전력조달 포트폴리오 전환

- ◆ 녹색프리미엄(단기 진입) → REC 구매(중기) → **직접·제3자 PPA**(장기)로 단계적 이행
- ◆ ESS 및 수요반응(DR) 참여로 계통 기여와 비용 절감 동시 확보
-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가능성 검토

3. 순환경제 체계 구축

- ◆ 서버·GPU 리퍼비시·재판매·부품 회수 계약을 **조달 단계에서 사전 체결**
- ◆ 배터리·냉각설비 폐기물 처리 경로 확보 및 재활용률 목표 설정

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로드맵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 활용 가이드

단계 3: 경쟁력 확보 — 2029~2030년

1. 무탄소 전원 구조 전환

- ◆ 장기 PPA 및 차세대 전원 옵션 계약을 통한 **24/7 무탄소전력(CFE)** 매칭 단계적 상향
- ◆ 재생에너지 부존량과 계통 여유를 입지 선정 1순위 기준으로 격상

2. 공시 성숙화

- ◆ 전환계획(transition plan)과 감축 경로 정량 공개, 제3자 검증 확보
- ◆ 글로벌 고객사 조달 기준(전력 구성·탄소집약도) 대응 데이터 상시 제공 체계

1. 주요 정부 지원제도 현황

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담당기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 특례	특화지역 내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입지 투자비 일부 보조	비수도권 이전·신설 기업	산업부·지자체
에너지진단 및 효율 개선	진단 지원, 개선 권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기·ESS 보급 지원	설비 교체·도입 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중심	한국에너지공단
녹색프리미엄·PPA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수단 제공	전력 사용 기업 전체	한국전력·발전 사업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녹색채권·녹색대출 적합성 판정	저탄소 인프라 투자 기업	환경부
CCfD (탄소차액계약)	저탄소 기술투자 리스크 완화	대규모 저탄소 전환 투자 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입 추진 중)

※ 연도별 예산·공고 일정·지원 요건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소관 기관 당해연도 공고문 확인 필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 활용 가이드

2. 기업 활용 가이드

① 순서를 지킬 것

에너지진단 → 개선계획 수립 → 설비지원 신청. 역순 신청은 대부분 반려된다.

② 입지 확정 전에 상담할 것

계통 접속, 특화지역, 지자체 인센티브는 부지 계약 이후에는 선택지가 급감한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사전 협의 시점이 전체 일정 리스크의 핵심 변수다.

③ 자료를 재사용할 것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용수 사용 데이터, 효율 개선 실적은 공시·녹색금융·보조금 신청에 공통 활용된다. 한 번 제대로 구축하면 반복 비용이 줄어든다.

④ 중복 수혜 제한을 확인할 것

동일 설비에 대한 복수 지원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⑤ 일정을 역산할 것

다수 사업이 상반기 공고·조기 마감 구조다. 전년도 4분기에 다음 해 신청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맺음말 'AI = 전력'의 시대, 지역사회 신뢰가 사업 속도를 결정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사업자가 전력 효율을 높이고 물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전력망과 생태계에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의 관건은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는가**에 있다.

주목할 점은 ESG 대응과 사업 경쟁력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전력 효율은 곧 운영비이고, 계통 접속과 지역사회 수용성은 곧 사업 일정이며, 전력·탄소 데이터는 곧 글로벌 고객사의 조달 요건이다. 미국에서 1분기에만 1,3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가 지연·중단된 것은 환경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실패** 때문이었다.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PUE·WUE·Scope 2·Scope 3 측정 체계를 **2026년 내 구축**하고, 신규 입지 검토 단계에서 계통·용수·수용성을 동시에 심사하며, 지역 편익 패키지를 인허가 신청 이전에 설계해야 한다. 냉각 인프라와 입지는 한 번 결정되면 10년 이상 고정된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순서다.**

※ 본 뉴스레터는 공개된 정부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법률·세무·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

환경

기후 변화 대응

녹색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조선일보 | 2026-07-05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7/05/TQPP57IWDREMXN3VP3ZGVVHJDM/>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040년 NDC 중간목표 설정 본격화

연합뉴스 | 2026-07-22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74400001>

현대차·기아 유럽공장 '탄소청구서'...CBAM 비용 최대 1440억원 추정

임팩트온 | 2026-07-30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61>

[공시 모니터링]카카오·네이버·엔씨, AI 시대 전력 폭증 리스크 어떻게 해결하나

임팩트온 | 2026-07-23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11>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안...2030년 53%까지

연합뉴스 | 2026-07-2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5851530>

S

사회

산업 안전

노동권

동반 성장

소비자 보호

EU CSDDD 공급망 인권실사 지침, 국내 기업 미준비 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 2026-07-13 |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1314284376>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누적시 1천만원까지

연합뉴스 | 2026-07-2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55400530>

노동장관,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간담회

연합뉴스 | 2026-07-30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086000530?input=1195m>

기업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공시 기준 강화 움직임

연합뉴스 | 2026-07-16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43200004>

산업부, 기업 의견 모아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의견서 제출 예정

아주경제 | 2026-07-13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13103628295>

식품기업 ESG 경영 핵심 '정보보호' 투자

SR타임즈 | 2026-07-16 | <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22>

플랫폼 노동자 53만 시대..."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인방송 | 2026-07-09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75>

[환경의 날] 유한킴벌리, 몽골 숲 복원 21년 성과 첫 정량화... "생태계 생산성 2.1배 향상" 외

이데일리 | 2026-06-30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44>

성평등전담부서 15개 부처에 신설...고용평등공시 법근거 마련

연합뉴스 | 2026-07-16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024051530>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주주 가치

글로벌 규제 대응

공정거래

ESG 공시 의무화 최종 로드맵 확정, 2028년 자산 10조원 이상 우선 적용

조선일보 | 2026-07-08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08/KWGUVEWMIRB CNLF55NUYTNMBM/

금융위원장 'ESG 공시, 기업 경영 나침반 되어야' 발언 주목

연합뉴스 | 2026-07-08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28700001>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발표, ISSB 기반 도입

연합뉴스 | 2026-07-07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7131100002>

"지배구조 성적표 뜯어보니" 투명경영 모범 기업 어디?

한국경제 | 2026-06-17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6179448b>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는 CEO 책임...내부통제의무 명확해진다

연합뉴스 | 2026-06-22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001100002?input=1195m>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관여할 때 ESG 요소도 고려"...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한겨레 | 2026-06-09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2694.html

법정공시 앞둔 K-산업, ESG 기준 혼재...인프라 보완 시급

매일일보 | 2026-07-09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918>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5.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6. 6월
녹색채권	328	328	326	319	318	321	334	331
사회적채권	1,772	1,799	1,811	1,815	1,809	1,818	1,847	1,860
지속가능채권	208	202	199	191	185	180	174	160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 분	'25.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6. 6월
녹색채권	282	285	282	272	274	272	273	265
사회적채권	2,085	2,102	2,108	2,104	2,089	2,081	2,097	2,094
지속가능채권	159	151	149	144	138	135	130	128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	38	78	131	161	204	226	217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배구조보고서	213	224	231	355	380	530	549	836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12)*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	6	14	27	36	36	36	36
글로벌	204	269	335	393	426	439	446	444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담당자 및 문의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ESG경영팀 | esg@korcham.net